

북미관계 개선 나선다... 서훈, 이번주 訪美 ‘양자협약’

文 대통령 제안 ‘중전선언’에 북한·미국 모두 긍정적 평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축 등 美 보좌관과 주요현안 논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참석을 마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에서 카운트다운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 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문제, 한미 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당시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의 중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중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달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복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도 요구한

다. ‘중전선언’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관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중전선언-평화협정체결-항구적평화체제전

환) 정책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관련 질문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동의 없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하기 어렵다. 특히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는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미션센터는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설치한 점도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한 게 사실상 북한보다 중국 관

리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미션센터가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이에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중전선언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지난 1일 복원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남·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계승 기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중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2~3년전, 수소경제 ‘초보’... 文 격세지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SNS에 대통령의 수소철학 게재 ‘대통령 의지대로 수소 선도국가 희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수소 선도국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대통령의 수소 철학과 통찰력’이라는 글에서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내 수소총전소 방문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 당시 문 대통령 질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그린 뉴딜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전한 뒤 “2018년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는 소회도 전했다.

박 수석이 ‘격세지감’이라는 소회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알파광장에 설치된 수소총전소 방문 이후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때 안건으로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적인 수소 경제 관련 용어부터 소개해, 불과 2~3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와 관련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파리 방문 당시 수소전기택시 기사의 수소총전소 충전 시연에 참석한 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시연 당시 문 대통령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기공식을 마친 후 전시된 두산중공업의 수소터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타고 충전소로 이동하려다 ‘경호원 만류로 하지 못한 점’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일화가 말하는 것은 수소에 대한 대통령의 통찰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의 당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34회에 걸쳐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국가가 충전소 같은 인프라와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생산에 제약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생산 능력이 있다면 최대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과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OECD 국가 중 수소총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못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국민께 인식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수소총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 원 이상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대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수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최영훈 기자

이준석, 이재명 겨냥 “민심 차갑게 돌아서”

“특검서 제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쳐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이대표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직원 같은 아무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 3차 경선에서 국민들께서 큰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빨리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발언 대부분을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그는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며 “제가 전당대회 때 광주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벌써 다섯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대표는 “부채의식이 없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살지 못하고 위선과 오만에 빠진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대표는 호남 지역의 당원 수급증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지난 금요일 자로 1만 5335명이 됐다”며 “지난 2월의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대통령 후보 본경선 TV 토론회를 가질 4명의 후보를 언급했다. 이대표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에서 패배하고 홀로 조용히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유승민 전 의원), 사모님이 호남 출신이라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갖고 계신 후보(홍준표 의원), 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호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독재자에게 증형을 구형했던 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소개하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희 당이 호남에 내어 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대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경차 ‘캐스퍼’, 광주 철거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지역 내 정관계 유착 근절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